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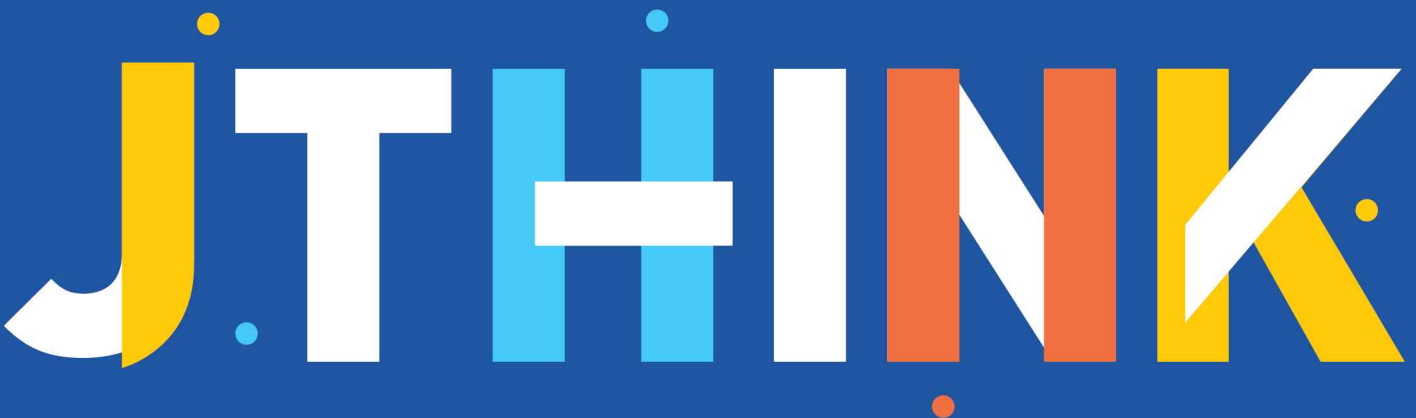
농촌마을 생애영농을^(生涯營農)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책 제안

연구책임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정호중 연구원



정책브리프 요약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배경·이유

- 정부 정책 한계 : 정부의 ‘공동영농’ 정책사업은 농지·인력 등 농업자원의 공동이용과 경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기존 농업인의 영농기반 유지와 생애영농(生涯營農), 지역 사회 환원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까지를 함께 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마을단위 대응 필요 : 고령화 심화와 부재지주(不在地主) 증가에 대응하여 개별 농가 수준의 영농 활동 장점을 살리면서도 농지·노동·경영·생활을 통합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앵커(중심)조직이 농촌마을 수준에서 필요가 매우 높음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기본개념과 특징

- 기본개념 : 농촌마을 내 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다기작(多期作) 작부체계로 농업경영을 효율화하고, 고령농 등 영농 참여 여건을 만들어 농지의 지속적 이용과 농촌마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마을단위 통합경영 조직
- 따로 같이 운영 : 개별 농가의 영농기반을 유지하고 자율적 경작(농업경영)을 존중하며, 작부계획·자재구매·농작업·출하 등 농업경영 기능을 사업추진 주체(마을단위 농업경영체-법인)가 통합·조정하여 사업을 운영
- 맞춤형 참여 : 고령농은 농지 등 임대 소득과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저강도 농작업에 참여하고, 예비·청년농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생애주기에 맞는 영농 참여를 보장
- 경제적·사회적 균형 : 농업 생산성과 유통 효율화로 농업소득을 올리면서, 농업경영 성과를 농촌마을의 공동급식·돌봄 등 환원하여 농촌사회 공동체 활력 도모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제적+사회적 균형을 추구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조직과 운영 방안

- 운영 방식(복합형 경영) : 자가경영(위탁, 개별 농가가 경작하되 농작업의 일부를 법인에 위탁)과 임대경영(고령농가 및 부재지주의 농지를 법인이 임차·집약하여 규모화 실현)으로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
- 조직 운영체계 : 의결기구(총회, 운영위원회)와 집행조직(사무국-농작업지원팀, 회계·정산팀, 경영통합팀 운영)을 갖추어 운영하며, 지원조직(지자체 행정, 지역농협,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 연계)이 지원하는 체계 마련
- 회계와 정산 : 실무력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지역농협으로부터 전문성(인력 등)을 지원받아 조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은 ‘임대농 분배, 법인 내부 적립, 농촌마을 환원’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산

단계별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추진과 지원

- 1단계(준비기) : 추진위원회 구성, 농지·인력·작부체계 등 통합 농업경영 전략 수립, 시범사업 운영(1~2년)
- 2단계(법인화·구축)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관 마련, 법인 설립, 재무·회계 체계 확립, 공동 영농사업 확대
- 3단계(안정화) : 생산·경작기반 확대, 작부체계 고도화, 수익 구조의 안정, 농촌마을 수준 돌봄 사업 내실화
- 행정적 지원 방안 : 단년도 보조금이 아닌 조직화 인건비·컨설팅비 등 정책 패키지로 지원, 지역농협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과 판로 연계 추진 지원, 조직의 사업·활동 역량에 따른 농림정책사업 연계 지원

* 본 브리프는 전북연구원 정책과제 「전북형 마을영농 정책 도입방안 연구」(2026.1.31.)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임

I. 농촌마을은 '생애영농'生涯營農을 고려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농촌마을에서 '생애영농'(生涯營農)을 고려한 조직화가 필요한 이유

- 농촌지역은 농가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재지주(不在地主)¹⁾가 증가하여 농지를 안정적으로 경작(耕作)하여 유지하는 데 여러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데, 개별 농업경영을 유지하면서 지역단위 '농업생산을 지속해 나갈 조직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음
- 농업생산을 담당할 후계인력 부족,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제약과 한계, 농업 생산자의 고령화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촌마을'을 거점(수준)으로 하는 농업생산의 조직화가 유효한 방식으로 그동안 강조되어 왔음
- 정부(농림축산식품부)도 이러한 지역농업의 생산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생산 요소 중 농지 집적화와 농업법인의 경영 규모화를 목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법인을 대상으로 농림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의 '공동영농 확산 사업'과 별도로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도 자체 시책으로 공동영농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지의 집단적 활용, 노동의 공동화, 농기계 및 시설의 공동 이용, 생산과 유통의 통합' 등이 정책사업의 주된 목적임
- 여러 의의와 성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이와 같이 공동영농을 촉진하는 정책사업은 법인 경영체 중심으로 농지 집적화를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여 전업적 대농(專業農)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농업구조 개선 정책이라는 농업 현장의 지적에 주목해야 함
- 유휴 농지의 확대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법인 중심의 농지 이용 효율화 정책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조정과정에서 개별 농가의 영농 특성과 농촌사회 유지에 필요한 생애영농(生涯營農)²⁾ 등과 같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이 없어 영농 활동에서 탈락(또는 은퇴)하거나 농촌사회에서 관계가 단절되는 등의 한계가 바로 그것임
- 따라서 농촌마을을 단위로 하여 농가의 개별 영농 특성에 기반하여 농촌마을이 협업적으로 농업경영을 이른바 '따로 같이'의 방식으로 '자산과 경영'을 통합적으로 성과(이익)를 다층적으로 만들어 내고, 생애에 걸쳐 영농을 하면서 마을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의 대응이 요구됨
- '마을영농' 방식의 농업생산 조직화는 개별 농가의 농업 자산(농지·농기계·인력 등)을 결합한 공동농업 경영전략인 만큼 사회적인 '필요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농업인)의 '요구와 수요'가 반영되는 방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유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농지 유휴화와 고령농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의 공동영농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농촌마을 단위로 농업경영조직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농업생산 조직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 '농촌마을' 단위로 농업생산을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은 시·군 범위에서 이뤄지는 지역농업계획·산지유통 계획 등이 실제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농지+인력+공동체'를 엮어내어 조직화 방식으로 보완해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며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1) 통계청의 임차농가 비율은 23년 44.5%, 24년 45.0%, 25년 43.5% 수준으로 나타남

2) 생애주기에 따라 영농참여 방식·역할·노동 강도·소득구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농업활동과 생활을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게 설계된 영농 체계를 의미, 생애영농의 핵심은 '언제까지 전업으로 농사를 짓느냐'보다 어느 생애 단계에서도 가능한 방식으로 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임

Ⅱ.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3가지 이유(생산·경영·사회적 이유)

농촌마을 수준의 조직적 대응, 생산+경영+사회적 조직화

- 시·군(지역농업)³⁾ 단위로 지역농업 조직화를 설계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정책의 실행 범위가 넓고 현실적 주제 유지에 제약이 크며, 영농과 결합한 농촌생활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영농의 기본 단위가 되는 ‘농촌 마을’ 수준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 ① (생산적 관점) 지역수준의 농업생산 체계 지속화 방안이 필요
 - 농업 인력의 고령화, 농작업 인력의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농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기반의 확보에도 많은 제약이 있음
 - 소량의 다품목을 생산하는 영세 분산된 농지 이용 구조⁴⁾는 농업 기계화는 물론이고 작부계획을 토대로 다작목 경작 등에 제약점이 되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에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함
 - 농촌마을 단위로 농지의 이용과 집적화로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마을 전체의 영농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농작업·영농 방식으로 생산체계를 안정화해 나가야 함
- ② (경영적 관점) 농업경영체 수준의 농업경영 안정화 방안 필요
 - 소규모 영세한 농업경영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소득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므로 개별적인 농산물 출하 구조를 농촌마을 수준에서 연결하고 엮어서 기존 산지유통 조직화⁵⁾가 아우르지 못하는 빈틈을 채워나가야 함
 - 농촌마을 수준에서 개별 농가의 영농 특징과 한계를 반영하여 농가의 영농 지속 의사를 기반으로 농촌마을 단위로 작부체계와 영농방식 등을 통합적으로 조직화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농촌마을 단위로 농업경영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식이며, 성과는 기존 산지유통 조직화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농가 등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고 농업소득을 올리는 기회 방안임
- ③ (사회적 관점) 농촌마을 단위의 활력과 통합적 유지 방안 필요
 - 농촌마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고령화된 독거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농촌마을의 공동체 기능이 예전 같이 작동하지 않아 사회적 관계망에서 탈락하여 급식·돌봄 등과 같은 생활지원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짐

〈표 1〉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

구분	주요내용
기존의 한계	생산·경영·사회적 대책을 분절적으로 추진 → 같은 현장에서 분리된 대응으로 진행
전환 필요성	토지·노동·자본·기술·경영을 종합적으로 결합한 접근과 농촌사회 유지 대책이 강조
핵심적 대안	개별 영농 장점 유지하면서 마을 전체 포괄하는 협동조합 방식 중심조직(앵커) 필요
정책의 방향	농촌마을 단위 조직화를 통해 지역농업+농촌마을의 지속성·안정성·공공성 동시 대응

3) 지역농업은 ‘개별 농가의 합(合)을 넘어 지역의 토지·사람·조직·먹거리·공공성을 고려해 계획되고 운영되는 집합적 체계’임

4) 경지면적 2ha 미만(면적 직불금 1구간) 농가가 88%를 차지하는데, 부재지주가 늘어 나고 있어 농지의 계획적 영농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음

5) 지역농협 참여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중심으로 시군·광역·전국 범위의 농산물 유통 조직화를 추진해 왔음

- 한편 농촌마을에서 고령·영세농가를 인위적으로 탈농(脫農)시킬 경우 기존 농촌사회 공동체 관계망에서 단절되어 급격히 신체적·정신적인 악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수준)에서 영농과 농촌생활을 이어가게 해야 함
- 이런 점에서 고령농이 참여 가능한 생애영농(生涯營農) 체계⁶⁾를 농촌마을 수준에서 마련하고, 돌봄과 급식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마을의 공동체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삶의 질 수준을 갖춰나가는 마을단위 대책이 필요함

④ (통합적 대응) 농업생산+농업경영+농촌사회의 일관 대응이 관건

- 지역사회·농촌사회·농촌마을이 직면한 위기와 위험 현상에 대응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생산의 조직화, 농업경영 강화, 사회적 대책' 등으로 구분되는 영역에서 분절된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같은 현장'에서 '분리된 대응'이 되어 대책의 효과는 반감하고 한계에 직면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대응은 농지라는 특정한 농업생산 자원을 집약하는 하나의 방안을 넘어 지역농업의 문제를 농촌마을 단위로 대응하고 관련한 여러 정책을 묶어낼 수 있는 앵커(핵심)조직으로 기능할 것임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전통적으로 다루어져 온 평면적 수준에서의 공동재배를 넘어 '생산+공동체+일자리+돌봄' 등 영역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방식이자 주체이며, 이러한 점에서 지역농업의 다기능성을 농업·농촌 현장에서 실제 구현할 실체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글에서 다루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유사한 관련 조직(들녘경영체⁷⁾, 지역농협⁸⁾, 협동조합⁹⁾)과 비교하여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표 2〉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와 유사한 관련 조직의 주요 특징 비교

구분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들녘경영체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기본단위	농촌마을	들녘·경작지구(필지단위)	시군·읍면 단위	조합원 조직
핵심성격	지역농업 실행조직	생산·기계화 중심 조직	농민 지원기관	공동경영 법인조직
주요역할	농지·노동·경영·생활 통합	공동경작·기계화	금융·유통·농자재 지원	생산·가공·유통 공동사업
농지 대응	신뢰 기반 임대·위탁·집적	생산 중심 집적	직접 조정 어려움	법인 단위 임대·위탁 가능
고령농 대응	임대소득·저강도 참여	생산참여 제한적	지원자 역할	조합원 참여 가능
청년·여성	여러 수준 참여 가능	생산인력 중심	교육·지원	조합원 가입 필요
생산 영역	○ (통합)	◎ (핵심)	△ (지원)	○
생활 영역	◎ (돌봄·급식·일자리)	△	△	△
경영 주체	마을영농 조직	들녘경영체	아님	법인
판매 역할	지역농협·통마 연계	일부	◎ (핵심)	○
포괄성	생산+경영+생활	생산 중심	지원 중심	사업 중심
지역 위치	결절점, 실행 허브	생산 하위조직	지원 허브	법적 사업주체
강점	농지·고령화·공동체 대응	생산효율·기계화	금융·유통 인프라	계약·회계·법적 안정성
한계	조직역량 필요	생활·사회기능 약함	현장 실행력 제한	공동체성 약화 가능

주 : ◎ 매우 강함, ○ 강함, △ 약함

6) 마을영농은 생애영농의 '실행 플랫폼', ①고령농 강제 탈농의 부작용 완화(탈농 → 소득단절·건강악화·공동체공백 / 생애영농 참여유지+부담경감), ②농지 유지와 생산기반 안정(고령농이 농지와 함께 완전히 이탈하지 않음, 농지 위탁·임대가 자연스럽게 연결), ③농촌 복지와 농업 정책 연결(영농정책+돌봄·급식·보건 정책 결합, 농촌마을 단위 통합 대응 가능)

7) '들녘경영체'는 수도작 작목 중심 농업생산과 기계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화 방식인데 비해, 마을영농은 농업생산, 공동체, 농촌생활 등의 영역을 포함 하므로 들녘경영체보다 포괄적이며 지역농업의 생활·사회 영역까지 연결하는 방식임

8) '지역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금융·유통·자재·기계 지원하는 주체이며, 마을영농은 실제 농업경영과 농업생산의 담당 주체로 지역농협이 지원자라면 마을영농은 운영자로서 성격을 가짐

9) '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등은 공동으로 농업생산과 경영을 해나가는 방식(법인격)을 이룸

Ⅲ.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기본개념과 역할·기능의 특징

1.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기본개념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영농 정책’이 포괄하지 못한 농촌마을 사회적 영역과 고령농 현실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농지의 집적과 농업생산법인 육성을 넘어 ‘농업생산의 기반을 유지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사회혁신형 농정 모델’로 정의할 수 있음

① 농지이용의 측면

- 고령화와 부재지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분산되어 소극적인 이용(벼농사 위주로 관행적인 농작물을 재배)에 그치고 있는 농지를 계획적으로 집중하고 연계하여 집약적으로 이용·관리한다는 특징이 있음

② 농업경영의 관점

- 개별 농가 수준에서 작목을 재배하는 과정에서의 농작업 인력 운용, 자재구매, 상품화 수준 유지, 출하·유통 등 ‘분산된 농업경영’을 전반적으로 통합하여 농가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경영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성격을 가짐

③ 성과배분과 환원

- 농업경영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지만, 개별 농가의 농업자산(농지·농기계·농업시설 등)에 비례하여 수익을 배분하여 참여 주체에게 개별 영농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과를 올리고 그 결과를 귀속시키는 구조를 목적으로 함

④ 농촌복지와 돌봄

- 농업생산 조직화에 그치지 않고 농촌마을 복지 영역까지 관여하여 마을단위 농업경영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급식과 돌봄 등 활동을 담당하여 농촌마을 공동체 기능을 유지하거나 활성화 하는 복지·돌봄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됨

〈표 3〉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기본개념

구분	핵심 내용	정책적 의미
개념정의	농촌마을 단위에서 농업경영과 농촌생활을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농업경영 조직	개별 농가 중심 대응 한계 보완 지역농업 실행 단위
농지이용	고령화·부재지주로 분산·저이용된 농지를 계획적으로 집중·연계하여 집약적 이용·관리	농지 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농업경영	노동, 상품화, 출하·유통, 자재구매 등 분산된 경영 요소를 통합 운영	거래비용 절감, 경영 효율·수익성 제고
성과배분	공동경영 하되 농지·농기계·시설 등 개별농가 자산 기여도에 비례한 수익 배분	참여 유인 확보 및 개별 영농 대비 성과 증대
마을복지	일자리 제공, 공동급식·돌봄 등 생활 지원기능 수행	공동체 유지·활성화, 농촌 삶의 질 향상
조직성격	느슨한 공동경작을 넘어 ‘따로 함께’ 방식으로 운영되는 준공공적 문제해결형 조직	농업생산+돌봄(복지)+공동체를 아우르는 앵커(핵심)조직 역할
지향모델	마을의 현실과 자원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농업·생활 관리 모델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구조 전환

⑤ 조직주체의 특성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농촌마을의 현실(고령화·농지이용 등)과 자원(농업자원)에 기반하여 그 한계를 시정하는 ‘문제해결형’ 사업조직이며, 느슨한 공동경작을 넘어 ‘따로 함께’ 방식으로 농업경영을 통합해 나가는 이른바 ‘준(準) 공공형(公共形) 사업조직’ 모델을 지향하고 있음

〈표 4〉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와 정부 공동영농 주요내용 비교

구분	농촌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부 공동영농 농업법인
목적	농촌마을 영농의 통합 운영	농지의 규모화 이용·효율성
구성	협동조합·농업법인 방식, 자경농+위탁농+임차농	농업법인 중심의 운영조직, 임차농+위탁농
성격	경제적 이익+사회적 효과 동시 추구	경제적 이익 창출

- 요컨대, ‘개별 농민’은 자율적으로 농사를 지어 나가되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임차·위탁·자가영농을 결합·병행하는 ‘복합형 경영체’이며 ‘전체와 개인’ 층위의 방식으로 마을단위에서 농업경영의 통합 조정 기능을 수행함
- 무엇보다 고령농의 농지 임대소득 보장과 농작업 참여 등의 성과보상, 예비·생활능자에게 일자리 제공, 마을의 공동급식·돌봄까지 역할을 하여 농촌마을(농촌사회)로 사업·활동 결과가 환원하는 방식을 지향하므로 공동경작에 그치는 정부의 정책사업¹⁰⁾ 등과 구별되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기반의 농업경영 통합형 조직’으로 정의함
- 조직의 구성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서 농촌마을을 주민(농가)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적 수익(私益)과 사회적 이익(公益)이 조화된 지역농업 조직화의 현실적 조직(경영체)임
- 전업화된 소수 대농(농업경영체)에게 농업자원(농지·시설·기계·작목 등)을 집중하는 농업경영이 아니며, 농촌마을 다수의 농가가 ‘개별’ 영농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농업경영의 방식으로 경제적 성과를 현실적으로 극대화하고 농촌마을 주민(고령농·귀촌자 등)과 함께하는 생애영농(生涯營農)을 실현하는 조직임

2.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주요특징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사업과 활동 방식, 지향하는 목표와 결과는 ‘①농업경영 통합형 구조, ②농지이용 효율화 기반, ③경제성과 사회성의 균형 있는 동시 실천, ④생애영농 실현의 기초 단위 기능, ⑤민주적·자발적인 운영체제로 지속 가능성 유지’ 등 5가지로 대별하여 정리할 수 있음

① 농업경영 통합형 구조

- 농촌마을 내에서 개별 농가를 하나의 농업경영 단위로 결합하여 묶으면서도 개별 농가의 자율적 영농(경작)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재배계획, 자재구매, 농작업, 농산물 판매’ 등 농업경영 영역 전반을 통합하는 특징을 가짐
- 이는 기존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생산자조직 등 법인 중심으로 하는 공동영농과 차이가 분명한데, 농가가 개별적·자율적으로 농사를 짓는 영농의 장점·효과를 살리면서, ‘개별영농(따로)’을 보완하는 ‘공동영농(같이)’ 방식을 상위의 운영전략으로 하여 농업경영을 통합하여 조정하는 모델로 농업경영 성과를 혁신적으로 제고할 장점이 있음

② 농지이용 효율화 기반

- 현실적으로 마을에 여러 이유로 분산된 농지의 이용 형태를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자가·임차·위탁’ 등 복합적인 형태로 영농 관리하는데,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 등의 계약과 방식으로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농지를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집적하여 농작업의 기계화 등 효율성을 높임

10)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영농 확산 사업’

- 이렇게 되면 다수의 고령농은 본인 소유의 농지를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농지 경작의 부담(경작 과정에서 겪는 농작업 등)을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담당하게 하여 어려움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③ 경제성과 사회성의 균형 있는 동시 실천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개별 농가를 묶는 통합형 농업경영체로서 '영농비용 절감'과 농산물 수확을 최대화하는 '생산력 향상'에 유리하며,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등과 연계해 '판매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특히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운영하는 통합형 농작업 전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영성과(소득)를 활용하여 농촌마을 공동급식 등과 같은 방식으로 마을 주민의 돌봄·복지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농업생산조직을 넘어 '마을공동체의 생활기반을 담당'하는 조직으로까지 역할을 수행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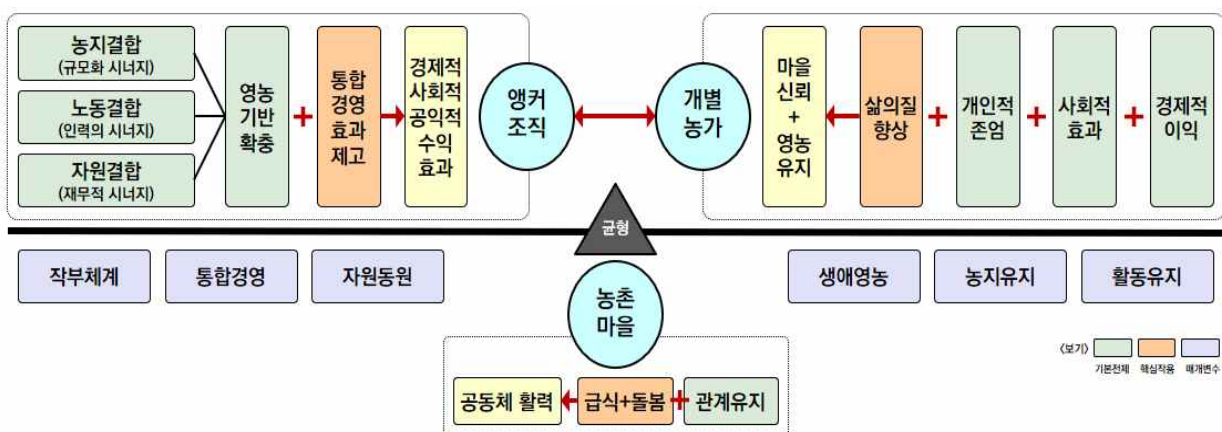
④ 생애영농生涯營農 실현의 기초 단위 기능

- 고령화된 개별 농가가 신체적 조건과 농작업 수행할 힘(역량)에 맞는 농업활동을 가능할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임대소득·농작업·경영참여 등)함으로써 생애의 전 기간에 걸쳐 농촌마을에서 살면서 영농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과 조건을 마련함
- 일방적인 고령농의 탈농은 복지정책(연금 등)으로 보완한다고 해도, 해당 농가의 '수입원'은 물론이고 농촌사회에서 사회적인 관계망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건강 상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농작업에 참여하거나 농지 임대소득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관계를 실현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음

⑤ 민주적·자발적 운영체제로 지속가능성 유지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희망하는 농촌마을 주민의 참여를 원칙으로 참여 구성원의 합의에 기반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여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협동조합형 사업조직'의 운영 구조를 가짐
- 의사결정은 '논의·협의·합의'를 하면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경영 수익은 '임대농 분배, 법인의 적립, 사회적 환원' 등을 원칙으로 투명하게 배분하는 구조임
-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이나 지자체(시·군) 농정 등과 연계되어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담당하는 핵심주체로 기능할 것임

〈그림 1〉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구조와 기능의 종합



IV.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조직구조와 사업운영 방안

1.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운영구조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의 ‘법인격’을 갖춘 조직으로 농촌마을의 개인 농가는 본인 소유 농지를 법인에게 제공(임대·위탁·이전 등)하여 마을단위 수준에서 농업경영을 통합해 나가는 체계임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담당할 사업기반이 되는 농지는 법인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확보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농촌마을 내의 개별 농가가 자신의 농지를 각자 소유하면서 영농을 하는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여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농지 기반을 갖추는 전략을 취함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사업·활동을 하는 농지는 ①‘개별 농가로부터 농지를 임대차하여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 ②‘자경하는 개인 농가로부터 농작업 등을 위탁받는 농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농지를 임대차로 제공하는 농가(임대농)로부터 농지를 받아 영농을 하고 보편적 수준에서 임대료를 제공하되, 영농 규모를 늘려가기 위해 법인에게 농지 임대를 하는 농가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인센티브 성과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함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사업을 책임지는 핵심 주체(대표, 사무국장 등)가 소유한 농지도 같은 방식으로 법인에게 임대차로 제공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는 소유와 경영을 통합하는 법인 농업경영체와도 구별됨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임대차 계약 등으로 확보한 농지 규모·여건에 맞춰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작부체계를 갖춰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경작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되, 수익의 배분은 기준을 정하여 임대농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법인 내의 수익으로 귀속하고 내부 적립과 지역사회 환원 등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됨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에게 농지를 직접 임대차하지 않는 농가도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자경 농가가 농작업을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농자재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의 작부계획(2기작)에 참여하여 생산기술 등을 공유할 수 있음

〈표 5〉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농지이용 방식에 따른 운영구조

구분	형태 1-자가경영	형태 2-위탁경영	형태 3-임대경영
주체	개별 농업인	농업인 + 경영체	농업인 ↔ 경영체
방식	· 농업인이 직접 경작 · 경영체와 작목·자재·출하 계획 협약	· 영농계획의 공동 수립 · 고령농은 일부 작업 위탁 · 경영체가 부족 노동력 충당	· 농지를 경영체 또는 지정 임차인에게 임대 · 시설은 유형별 기간 준용 계약
정산	· 개별 농가 수익 보유	· 위탁작업 비용은 협의 후 정산	· 경영체가 임차료를 소유자에 지급
특징	· 경영통합에 동의하면서 자율성 유지	· 고령농 작업부담 경감 · 예비농·생활농업인 일자리 창출	· 농지 집약화 실현 · 매도 시 경영체·지자체 매입 가능

2. 조직체계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법인화를 전제로 조직을 구성하는데, 조직의 운영체계는 ‘의결기구(총회, 운영위원회), 집행 조직(사무국, 팀), 지원조직’ 등으로 구분하여 조직함

① 의결기구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사업계획 전반을 결정하고 일상적 사업과 활동 방침을 정하는데, 협동조합 방식의 법인화와 조직화를 전제로 하므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둠
- ‘총회’는 연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법인)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1인 1표의 원칙으로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단위임
- ‘운영위원회’는 법인의 규정에 따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상설 결정하는 단위로 운영위원장이 법인 대표를 맡아 전반을 책임 총괄하여 사업과 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임

② 집행조직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단위가 사무국인데, 법인이 수행하는 세분화된 사업과 활동을 전담하는 팀을 하위에 두어 실무적인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함
- ‘사무국’의 국장은 법인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사무국장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법인 경영과 영농의 전반을 직접 담당하는 역할을 함
- 사무국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사업과 활동을 고려해 ‘농작업지원팀, 회계·정산팀, 경영통합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농작업지원팀’은 법인이 임차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간 농작업 계획을 만들고 직접 영농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법인에게 농작업을 위탁하는 농가의 농작업도 실무적으로 총괄하여 담당함¹¹⁾
- ‘회계·정산팀’은 법인의 영농 등 사업계획 전반을 관리하면서 회계와 정산을 담당하는 팀으로 법인에 참여하는 역량이 있는 핵심 주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무국장이 총괄하되 행정의 실무력을 가진 귀농·귀촌자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음
- ‘경영통합팀’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사업 전반(작부계획·공동구매·공동출하 등)의 수행을 위해 기존 개인 농가의 농업경영을 존중·유지하는 수준에서 법인의 농업경영 계획에 맞춰 농촌마을 내에서 관계를 넓혀 나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음
- 특히 ①농자재 등의 공동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 ②개인 영농과 작부체계를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경영 방식으로 맞춰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가, ③출하와 판매를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농가 등을 조직화하면서 마을 전체로 ‘따로 같이’ 방식으로 마을단위의 농업경영 통합을 담당함¹²⁾

〈그림 2〉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조직 체계



11) 실제 운영 형태는 법인 구성 핵심 주체(대표, 사무국장 등)가 자신의 영농을 법인 영농계획에 맞춰 농사를 지으며 임차농지를 부가하는 방식이며, 필요시 농작업 위탁 수요에 대응하여 농작업 대행, 농작업 일정 및 노무관리(농기계포함)를 맡음

12) 구체적으로 자경·위탁·임차농 전체의 작형 및 재배계획 통합관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연계한 출하계획 수립, 농자재 공동구매 생산계획 재배기술 조정 등을 담당함

③ 지원조직

-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의 구체적인 실무까지 지원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초기 새로운 현장의 실험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량을 갖춘
- '지원단'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소속된 해당 지역농정(시·군)의 지원 시스템 상에서 관련 주체(기관) 등이 참여하여 실제 법인 경영은 물론 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함
- 지원단의 핵심 멤버로는 지역농협, 지자체(시·군, 읍·면) 농정 담당자, 생산기술 및 농업경영 전문가 등으로 사업과 조직모형을 성과적으로 마련하는 각종 지원활동을 맡음
- 무엇보다 지자체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필요 컨설팅 등과 같은 운영지원 비용도 마련할 수 있음

3.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회계·정산 구조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은 법인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합의하는 수준으로 법인경영과 회계가 집행·운영되면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있음
- 회계 및 정산의 업무 흐름을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정립하여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실행해 나가야 하며, 회계·정산의 전반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법인 대표 및 사무국장이 결재하여 집행하게 되는 구조임
- 회계 및 결재는 해당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관계하는 지역농협(회계인력)으로부터 업무 지원받아 입출금 등을 관리 받게 하여 법인의 회계 실무 업무를 최소화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추진할 수 있음
- 이러한 법인의 정산과 회계의 결과는 매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구성원(조합원)에게 월례회의 등을 통해 보고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하여 총회에 일괄 보고하는 체계를 갖춘

4.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체의 운영원칙

- 첫째, 경영통합(통합경영)의 방침을 통해 농촌마을 전체의 농지·작물·농작업 계획을 하나의 법인(경영체)이 총괄하여 나가는 방식을 취해 나감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중심이 되어 농촌마을 단위에서 품목별 '재배 협정' 등을 기반으로 농업경영을 관리하고, 생산·출하·수급 조정 등은 농촌마을 단위 수준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임
- 둘째, 실제 경작은 개별 농가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영농의 장점(따로)을 살리면서 농촌마을 수준의 경영통합으로(같이) 나아가는 것을 방향으로 삼음
 - 농업생산의 주체는 개별 농가이며 법인은 농작물의 생산을 명령하지 않고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도모해 나가는 방식임
- 셋째, 실제 경작을 개별 농가가 직접 담당할 경우 농작업은 '농작업지원팀'이 지원하게 되는데, 농촌마을의 다양한 구성원이 법인의 영농(농작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과 구조를 마련함
 - 고령농은 농작업 등 일손 지원을 중심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 경우 작업량과 표준 작업시간과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생애영농이 가능한 틀을 갖춘
- 넷째, 개별 농가의 농지 소유권을 존중하면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농지를 가진 농가와 임대차 계약만으로 법적·행정적 절차를 완비할 수 있음
 - 농지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임대인)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임차인으로 지정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는 마을 표준 기준 또는 협의 기준 적용함¹³⁾

13) 개별 농가가 직접 경작하지만 농작업 중 일부를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에 위탁하고 작업비는 표준단가로 정산함

V.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추진단계와 정책의 역할

① 사업의 준비 단계 (1단계)

- 첫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구성에 필요한 인적(농가)·물적(영농기반) 자원을 동원하여 추진 단위를 꾸려 시작함
 - 추진위원회는 법인격을 취득하기 이전의 임시조직 성격을 갖는데, 실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조직 운영과 영농 활동을 담당할 필수 인력의 준비가 관건으로 참여 농가 중심으로 해당 마을 농지, 농기계, 작부체계(재배 작목), 농업인력 등 동원 및 참여 가능한 자원을 조성함
- 둘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 주체(농가)의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영농계획 등 농업경영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작부체계, 농지이용, 자원동원, 경영회계)을 수립함
 - ‘작부체계 계획’은 참여 농가 품목에 기초하되 소득 향상에 요구되는 ‘품목선택+농지규모+출하시기’ 등을 고려한 영농 계획이며, ‘농지이용 계획’은 참여 농가 농지 이용 형태를 자경·임차·위탁 등으로 결합해 개인 이익과 조직 수익을 적절하게 만드는 기반임
 - ‘영농자원 계획’은 참여하는 농가가 보유한 농기계·장비·시설과 작부체계+농지이용 계획을 토대로 농업 노동력 동원·투입에 관한 방안이며, ‘경영회계 계획’은 작부체계·농지이용·영농자원 계획 등을 바탕으로 수익과 비용 관리 틀을 설계하는 것으로 회계·정산·관리의 실행 방안임
- 셋째, 앞선 준비의 과정을 통해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방식으로 영농을 운영하는 데, 경영통합 계획에 따라 일정 시점(1~2년)에 걸쳐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실제와 효과를 실증함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영농계획에 따라 임차농지를 중심으로 2기작 품목을 시범 재배하면서 참여 주체의 영농 전반에 필요로 하는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추진함
 - 일정 시점에 걸쳐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운영의 실제 효과를 실험하면서 참여하는 주체(이익 환원)는 물론 농촌 마을과 수준에서 주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공동급식 등)을 보여주어 시행의 동력을 확보함

② 사업과 기반구축 단계 (2단계)

- 첫째,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확인하고 증명한 효과를 바탕으로 임의조직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법인화를 위해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정관이 필요한데 표준안을 기반으로 해당 마을의 수준과 여건에 맞춰 운영 규정으로서 정관을 논의하고 마련함
 - 법인화 추진위원회를 꾸려 정관을 논의·확정하고 나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 법인의 설립 인가 및 농업경영체의 등록 등이 주요 내용임
- 둘째, 법인화에 따라 경영계획과 재무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시범 준비 과정에서 검토하고 점검한 내용을 법인 경영체 수준으로 확립함
 - 시범사업 과정에서 적용하고 검증한 경영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재배품목(작목) 선택(다기작), 재배면적(임차·자경 등) 확정, 생산비용(농기계·농자재·노동력 등) 결정 등을 통해 연간 판매액을 세워 목표를 정하고 실제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핵심임
 - 재무체계는 법인 경영에 필수가 되는 출자금·운영자금·공동기금 등과 같은 회계를 구분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회계 담당자 지정)이 중요함

- 사업과 활동 결과는 수익 배분과 성과 보상의 기준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법인에 농지를 임대한 농가에게 환원, 법인으로의 적립, 농촌마을 수준의 환원 등으로 나누어 합의하는 것이 관건임
- 셋째, 마을단위 농업경영체가 수행하는 공동 영농 사업을 늘려나가는 단계로 확대하는 것으로 품목별 생산계획에 따른 자원의 동원과 판매력 증대 등이 성과를 제고하는 핵심이 됨
- 법인이 직접 담당하는 수준으로 농자재의 공동구매, 농기계의 이용 효율화를 제고해 나가면서 위탁영농 방식의 농작업단 운영을 통해 영농 규모를 늘려나감
- 성과가 농촌마을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기 위해 농업경영 성과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을 지속화해 나가야 하는데, 농촌마을 공동 급식과 고령농가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감

③ 운영의 안정화 단계 (3단계)

- 첫째, 법인 경영체로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사업과 활동 등 농촌마을 관계 경영 전반에 걸쳐 안정화해 나감
 - 공동농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농지를 중심으로 법인과 농민 개인 간 농지의 임차와 위탁, 법인의 직접 영농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정착시켜야 함
 - 법인이 담당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부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배·출하계획을 연차별로 정교화하며, 출하를 전제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경영·재무 등 법인 운영을 참여 주체(구성원)에게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공유함
- 둘째, 법인 경영의 수익 구조를 확립해 나가는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로 작부계획 및 경영계획 등에 따라 수익을 올리고 비용을 줄이면서 참여 농가(조합원)에 대한 수익의 배분과 농촌마을의 사회적 환원을 높여나감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법인)의 농업경영 성과는 ①임대농 환원, ②법인 적립, ③지역 환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익을 배분하는 체계를 안정화하면서, 농자재 공동구매와 농작업단 운영 등으로 법인의 농업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안착시킴
 - 무엇보다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산비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출하 판매할 수 있는 수준에서 품질을 관리해 나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소득 안정화를 꾀함
- 셋째, 법인으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사업 결과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조직과 관계하는 관련 주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감
 - 법인의 수익을 결정짓는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 체계를 견고화해 나가면서, 법인의 사업과 활동은 지자체 수준 지역농정(사업)과 연계한 자부담 역량을 고려한 필요 사업을 지원받음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의미와 가치는 해당 마을을 비롯한 농촌사회(지역사회) 내로 성과의 사회적 환원이 단절되지 않게 공동급식 등 돌봄 사업을 내실화하여 운영하는데 달려 있음

④ 행정의 지원·연계 방안

- 공동 농작업과 농자재·농기계 등을 지원해 실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등을 낮추고, 농산물 판로를 지역 농협 수준에서 지원하여 확대하거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과 연계해 일정 수준의 출하 대응력을 높여나감
- 시범사업의 정책적 성격을 감안하여 단년 보조사업이 아니라 '정책실험'을 통해 모델(사업방식 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농촌마을 단위의 지역농업 조직화 실행단위로 인정하고 검증하는 '체계형 시범사업'으로 설계해 추진함
- 정책적인 지원은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에 필요한 인건비·활동비·컨설팅 등을 지원해 협업적 경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기반·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타 농림사업을 활용해 시설을 지원하는 구조이어야 함
- 단일 정책사업보다 마을영농 조직화비, 농지 통합관리 구축비, 공동작업단 운영비,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비, 농지 은행 임대형 사업,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지정비사업 등 정책패키지 방식으로 시범사업의 지원을 고려해야 함

VI.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설명

Q1.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란 무엇인가?

- 농촌마을 내 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법인(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을 효율화하여 고령농을 보호하고, 농지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마을공동체 유지와 회복을 추진하는 마을단위 통합경영 조직임

Q2.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공동 농업경영인가?

-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모델은 ‘공동경영’이 아니라 ‘통합경영’을 지향하는데, 생산과 경작을 한데 섞는 공동 경작이 아니라 농업경영 기능을 하나로 묶는 통합 농업경영의 모델에 가까움
- 영농 사업조직이 통합경영의 중심이 되어 경영계획·농작업·자재구매·출하 등을 통합·조정하고, 자경·위탁·임차 등 참여방식에 따라 농업경영에 참여하며, 경영성과는 농지·농기계·농작업 등 참여방식과 기여 수준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배분함

Q3.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는 공동 경작인가?

- 전통적인 방식의 ‘공동경작’은 아닌데, 토지소유는 개인이 하면서 농업경영만을 ‘통합’하는 구조로, 농작물의 재배 계획·판로·작형계획은 공동으로 수립이 가능하며, 경작은 자경·임대·위탁 모두 가능함, 비용·수익은 경작자에게 귀속됨

Q4. 생애영농(生涯營農)은 어떻게 구현하나?

- 사업추진 주체(법인)가 농촌마을 내 다양한 연령층이 각자 영농 역량과 생애단계에 맞게 농업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차농지 경작, 농작업 참여, 경영·사무 지원, 농작업지원팀 참여 등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 생애영농을 지원함

Q5. 임대농이 임차농에게 농지를 빼앗기는 거 아닌가?

- 기존 임차농의 경작권 유지가 원칙이며, 농지 소유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내놓더라도 기존 경작해 온 작기(1기작)는 유지하고, 추가되는 작기(2기작 등)만 법인이 경작해 임대료와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작부체계 분할)으로 추진함

Q6. 임대농에게는 무엇이 지급되나?

- 기본적인 임대료(계약에 따른 연 단위 지급)와 추가 성과보상(추가 수익 배분)인데, 이 두 가지는 법인과 임대농 간 공식 계약에 따름

Q7. 고령농의 임대소득 보장은 어떻게 하는가?

- 고령 농업인의 임대소득 보장을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데, 2기작·시설재배 등 추가 소득을 설계하고 추가 수익의 일부를 임대료로 보상하되 법인은 협의·계약을 지원함

Q8. 법인의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 임차농지 경작 수익에서 충당하는데, 총수익→경영체 운영비→적립금→임대농 성과보상 등의 구조로 초기 출자금의 일부를 최소한의 경영비로 사용하도, 회계·정산 등 업무는 농협에 위탁할 수 있음

Q9. 마을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 법인이 임차농지 경작으로 창출한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성과보상 형태로 임대농에게 지급하는 데, 이는 현금 지급 방식의 ‘마을연금’으로 볼 수 있으며 마을 복지제도와 연계가 가능함

Q10. 생산된 농산물은 어디로 출하하나?

- 기본 방침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조공법인·지역농협 등)과 연계 출하하며, 전문조직을 활용하여 출하되는 구조임

참고 문헌

- 강마야·이다영. 2025. 저출생·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협업적 농업생산 및 경영 사례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자경. 2019. 공동자원을 둘러싼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와 공동관리-제주 행원리 사례를 중심으로. ECO. 23(1).
- 농정연구센터. 2024.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정연구센터. 2024. 지자체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이향미. 2025. 공동영농,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엔진. Special Report 148.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채종현. 2025. 경북 혁신농업타운 성과와 과제 -경북형 공동영농 모델-. 경북연구원.
- 채종현. 2022. 경북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기본구상. 대구경북연구원.
- 경상북도. 2017. 2017년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추진계획.
- 경상북도. 2017.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추진계획.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4.12.18. 농업·농촌 혁신 전략-미래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 농림축산식품부. 2025. 공동영농 확산 지원 사업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2024.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영농모델 확대 방안 연구.
- 농민신문. 2024.7.16.. 고령농 농지 공동경작...농업에 '희망' 될까.

Vol. 69
POLICY BRIEF
JTHINK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이 정책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